

'소비쿠폰' 한달 만에 국민 97% 받았다... 상위 10% 뺀 2차 지급 속도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21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97%에 달하는 국민 대부분이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489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 7067명)의 9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이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신청과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05만7233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사랑상품권은 900만2646명(18.4%)으로 모바일·카드형 781만8365명, 종이형 118만4281명이었다. 선불카드에는 586만9632명(12.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875만9020명), 경남(309만7613명), 인천(293만1864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대구(227만4439명)가 97.4%로 가장 높았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사업 방식이 복잡하고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11일 만에 90% 지급을 완료했다. 또 첫 날 오전 신청자 급증으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앱 접속 지연 외에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1일 1차 신청 한달... 13일 기준 4893만명 신청 소비쿠폰 순항... 만족도도 높아 "소비진작 도움" 선불카드 '색깔차별' 논란... 부정사용 등 허점도 9월 22일, 90%에 10만원... 상위 10% 선별 '관건'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5.5%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실제 행안부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2주간의 업종별 사용액과 매출액을 카드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한 결과, 첫째 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보다 19.5%, 둘째 주는 8.4% 증가했다. 소비쿠폰 사용은 대중음식점(41.4%)이 가장 많았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색깔 차별' 논란으로,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비수도권 3만원 추가 포함) 18만원권은 분홍색(일반국민), 33만원권은 연두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3만원권은 남색(기초생활수급자)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데 카드 색을 달리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광주시는 스티커 부착 조치 등 밤샘 작업에 동원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부정 사용 등 허점도 발견됐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회 등 학술 단체가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거나 사용 제한 업종 중 하나인 '사모' 직영 매장이 절차상 문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사용자 제외 등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남은 기간 1차 지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관건은 소득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는지다.

정부는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위 10%의 건강보외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으로 추정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외가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해 건강보외가 결정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울러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

구인 경우 건보료 산정 때 특례를 만들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실제 경기부양 효과

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효과와 관련해 비판이 많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與, 특검 연장 카드 '만지작'... 내년까지 특검 수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개 특별검사(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이 각각 90일, 60일간 수사 기간을 담보하고 있으나 관련 의혹이나 인지 사건이 늘어나면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당 차원의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만큼 개정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의 경우 '60일 이내'로 규정됐다.

특검법상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은 특검 수사 방해 대응 및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특검 활동이 중반부에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특검 연장' 주장도 제기됐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출범식에서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내란 특검은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는 내란·김건희 등 일부 특검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뉴스스와 통화에서 "당연히 공감대가 있으니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50일 수사 가능 민주당 내, '법 개정해 추가 연장' 주장 나와 내년 지방선거 영향 미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당내 "추가 연장 논의는 시기상조" 분위기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며 "(다만 연장 논의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관련된 의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특검은 새로운 이슈도 많고, 계속 튀가 나오지 않나. 연장해야 될 것 같다"며 "내란 특검도 아마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도 "수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인지 사건도 있다"며 "최소한 김건희·내란 특검은 연장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많다. (다만)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특검 연장 목소리를 높이고, 내년까지 특검 수사를 이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엇갈린 반응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 특검은 (최대) 150일까지 수사하는데 아직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수사를 빨리 하라고 해야지, 연장해준다고 천천히 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필요하다면 특검이 요청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특검에서 혐의자들의 수사) 협조가 부족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특검 수사 연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검이 요청하면 받아주고, 요청을 안 하면 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 18일 개최

김대중평화센터는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을 진행한다. 추모식에는 추모위원장인 김대중

국회의장과 정정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또 노재현·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과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이종찬 광복회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등 800여명이 함께 한다. /뉴스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 그리고 힐링
함께라서 더 좋은 치유

할인 EVENT!
가족(3인 이상) 30%
단체(10 이상) 20%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10%

위치 ▶ 전남 완도군 신지면 해양치유길 100
Tel. 061) 550-7675~6 / 인터넷(홈페이지) 예약 필수

프로그램	기본 ①	기본 ②	디럭스	프리미엄	전문 수중 재활
	대인 36,000원 소인 26,000원	대인 28,000원 소인 22,000원	대인 80,000원	대인 125,000원	1:1 90,000원 2:1 70,000원

* 안전상의 이유로 36개월 미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